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

고용안정 쟁취 !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힘찬 민중연대로

자본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에 맞서

108년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복원하는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자.

108주년 노동절 기념

430 청년학생투쟁대회

장소 :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일시 : 1998년 4월 30일

108주년

MAY-DAY 자료집

서울시립대학교 MAY-DAY 참가단

15대 동아리 연합회, 14대 총여학생회

대결

박노해

아늑한 사장실에서

책상을 마구치며

노조를 포기하라고

개새끼들, 불순분자라고

길길이 날뛰는 저들의 머리속은

기업주와 노동자는 사슴과 돼지들처럼

결코 동등할 수 없다는

계급사상으로 굳건히 무장되어 있는지 모른다.

돈과 무력과 권력을 전지전능한 하느님으로 믿는

봉건적이고 독재적인 저들과

온 세상 관계가 평등과 사랑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믿는

민주적으로 단결된 우리와의

이 팽팽한 대결

묵묵히 일하고 사키는 대로 따르고

주는 대로 받고 성은에 감복하는 복종과 충직만이

산업평화와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훌륭한 노동자의 도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란

동등하게 존중하며 일치할 때 안정이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서로를 받쳐줄 때

큰 힘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체험으로 안다.

계급사상이 골수에 박힌 저들은

가진 자와 노동자는 사슴과 돼지처럼

별종으로 구분되기를 원하기도 모르지만

그대들이 짓밟고 꺾뜨릴수록

우린 더욱더 힘차게

인간으로 평등으로

민주주의로

통일로

쫓구치는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숙명의 대결을

어찌 한단 말어냐.

1. 메이데이의 역사

1. 세계 노동절이 있기까지

그날 미국의 중요한 공업도시 시카고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달랐다. 공장의 기계소리, 도로를 오가는 차소리, 상점 앞에서 흥정하는 소리로 항상 왁자지껄하던 그 거리에 그러한 소리들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었다.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으며 운전수들은 쉬고 있었다. 공사장의 망치소리도 멈추었다. 공장굴뚝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던 연기가 보이지 않는 푸른 하늘은 가끔 하얀 구름만 소리없이 오갈 뿐 고요하기만 했다.

그러나 공업도시의 활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활기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철같이 강한 힘으로 뿜고 있었다.

아날은 토요일, 정상적으로는 작업이 있는 날이다. 그러나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아내와 자식들의 손을 잡고서 웃으며 재잘거리며 농담을 나누면서 마냥 거리로 모여들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외출복을 입은 노동자들의 모습은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검게 찌든 얼굴에는 쾌활한 활기가 감돌았고 눈빛은 반짝거렸다. 어찌 보면 축제일 같기도 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길 건너편과 가까운 건물의 옥상에는 반대로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노동자들이 행진하게 될 길 건너편에는 무장한 경찰들이 전투대세를 갖추고 도열해 서 있었고, 주요 건물의 옥상에는 경찰들과 민병대, 탐정소 직원으로 행세하고 다녔던 깡패들이 소총을 비롯한 각종 전투장비를 가지고 감시대를 내려다보며 경계를 하고 있었다. 또한 주방위군 본부에서는 기관총을 앞세운 1300여명의 주방위군이 출동준비를 완료한 상태였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전역과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일제 파업을 단행하고 시가행진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전국적으로 34만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시가행진에 참여하였다. 시카고에서는 8만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마침내 시가행진이 시작되었다. 벽한 연대감으로 숨가쁘게 고동치는 가슴을 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명씩 떼를 지어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부모와 같이 거리로 나온 어린아이들은 들떠서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대열 속을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뒤를 잇고 있는 웅장한 행렬을 자꾸만 돌아다 보았다. 거대한 사람들의 물결은 단결된 노동자들의 힘이 어떠한가를 웅변하였고 남음이 있었다. 그 끝없는 행렬 속에는 백인, 흑인, 혼혈인, 보헤미아나 독일, 폴란드에서 온 이주민들이 섞여 있었다.

행진 대열은 프론트 호반을 향하여 서서히 모여들었다. 여기서 지도자들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보헤미아말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어떤 사람은 폴란드어로 연설하였다. 국제 노동자협회의 지도자인 파슨즈는 단결된 노동자의 힘은 아무도 당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신문의 편집장인 스파어즈는 독일계이었으면서도 유창한 영어와 훌륭한 웅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완전무장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군대를 무색하게 스파어즈의 연설을 끝으로 5월 1일의 대행사는 평화롭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다.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뒤흔어내게 만들었는지,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구절을 무색하게 하는 것, 그것은 미국역사의 과정이기도 하다. 소총을 앞세운 '위대한 개척'은 자신의 땅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인디언들의 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으며 아프리카에서 사냥되어온 흑인노예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아니라 사육되는 가축이었다.

남북전쟁으로 흑인들은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물론 남북전쟁도 '노예해방을 위한 인도적 전쟁'은 결코 아니었다. 개척 농민들은 선조로 하는 남부의 부유한 농장주들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차츰 부를 축적해가고 있었던 북부의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익이 대립되어 나타난 것이 남북전쟁이었으며, 북부의 승리로 인하여 미국에는 본격적인 산업-공업화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목화밭에서 뜨거운 태양아래 끊임없이 일해야 했던 흑인들은 이제 밀폐된 공장의 기계소음과 나쁜 공기 속에서 일해야 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계속하여 이주민 노동자들이 밀려왔다. 12시간, 14시간 심지어는 18시간씩 일하면서도 거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의 저임금을 받았던 흑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해 공장과 탄광에 배급하였으나 중개인들에게 지급된 일당 50센트씩의 임금 중 과연 얼마나 노동자들의 몫으로 지급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으면서 성장해갔다. 1880년대에 진행된 가장 큰 사건은 독점이 높아지고 기업합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도 부자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록펠러가 등장한 것도 이 1880년대였다. 독점의 결과로 소수의 자본가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다. 갑작스레 번 재산을 어떻게 줄 몰랐던 자본가들은 무절제한 사치와 낭비를 즐기기도 했다. 그들은 말잔등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사랑하는 여완간에게는 1만 5천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했다. 어떤 호화로운 연회장에서는 100달러짜리 자페로 담배를 맡아피우는 일이 흥미로운 오락인 양 서로 경쟁하듯 벌어지기도 했다.

제일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라는 찬사도 이 재벌들의 공정을 참달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어떤 때

는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록펠러와 모건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재계의 왕으로 군림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동자의 보통 작업시간은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매네스터주에서 18시간을 넘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보아 하루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본가들의 횡포와 비참한 생활에 맞서 노동자들은 차츰 단결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운동이 끊임없이 일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산업별 노조가 건설되었으며 파업도 빈번해졌다. 1886년 전국적 노동운동단체로 '미국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당시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하루 8시간 노동제 확보였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구두'(8시간 노동제를 실시한 공장에서 생산된 구두)를 신고 '8시간 노동 담배'를 피우고 다녔으며 8시간 노동제 정취를 위한 투쟁가를 불렀다. 8시간 노동제 정취를 위한 파업과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단업은 더욱 심해졌다. 1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안방법원의 파업금지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체포되었고 4월 7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파업노동자와 경찰들 사이에 전투가 일어나 일곱명의 노동자가 파살되었다. 그 외에도 우악장패들에 의해 전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학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미국노동총동맹'은 5월 1일 8시간 노동제 확보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뉴욕타임즈'나 '사카고 데일리 뉴스'처럼 유수한 신문들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은 8시간 노동제 추진운동을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몰아붙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신문들은 5월 1일 파업은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이고 그날 대규모 폭동을 발생시킬 음모가 꾸며져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5월 1일 총파업과 시가행진은 평화롭게 끝났고 경찰과 군대는 무안하게 풀죽어 정상임무로 돌아왔다. 일단 대폭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던 신문들의 예언과는 달리 유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거리는 평화스러웠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여기저기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월요일,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사건은 그날 공장을 폐쇄하고 농성중이던 '메코믹 농기계 공장'에서 벌어졌다. 30여명의 장패들이 갑자기 들어닥쳐 파업중이던 노동자들을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뺄 것이다. 그러나 숫적으로 적은 장패들은 곧 노동자들에게 밀려 공장 밖으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경찰들이 나타나더니 노동자들을 향해 권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들은 쫓아가는 노동자들의 등을 향해 총을 쏘아댔으며 노동자들은 총을 맞고 쓰러졌다. 어린 소년도

포함된 여섯 사람이 살해되었다.

이 학살 사건은 곧 노동운동지도부에 알려졌으며 격분한 노동자들은 다음날 저녁 헤이마켓 공장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날 저녁 공장에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노동운동 지도자인 스파이즈와 파슨즈가 임시연단으로 쓰는 마차 위에서 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닌 다른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이다!"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180명의 기동대원들이 군대식으로 열을 짓고 걸어오고 있었다. 경찰사장 본필드가 팔뚝이 연설하고 있는 마차 앞으로 다가와서 "이 회합을 즉각 평화적으로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고 소리쳤다. 팔뚝은 긴장하여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그러나 이 집회는 사당도 보다시피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응수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붉은 삼광이 번쩍하면서 폭음이 터졌다. 어둠 속에서 청중들은 어쩔 줄을 몰라 갈팡질팡하였고 경찰은 난폭하게 마구 총을 갈겼다. 노동자들은 부상을 당하고 쓰러지고 잣밭했으며 경찰을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달아났다. 경찰들은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이 폭발사고로 경찰 한 명이 즉사하였고 일곱명이 중상을 입었다.

다음날 사고를 비롯한 전국의 신문이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였다. "경찰을 향한 폭탄 투척으로 살인국이 연출된다."라는 표제 아래 기사내용은 파에 굴주된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아대며 습격했다는 식이었다. 많은 신문사실에서 그것은 무시무시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을 목베어 버려라고 외쳤다. '사카고 트리뷴'지는 사실에서 "국민은 암살도당인 스파이즈와 슈왓 및 팔뚝, 파슨즈를 즉각 체포하여 살인죄로 처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폭탄투척사건은 경찰의 그나뎃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신문과 언론에서 '불온한 공산주의자'들을 즉각 처형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우악세력들이 제 세상을 만난 듯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은 껍질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경찰은 노조 사무실과 노동운동 단체들을 습격하여 파괴했으며 노동운동지도부는 일제히 체포되었다.

재판의 배심원들은 가업주 및 그 하수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판사는 편파적이었다. 경찰들은 무자한 노동자들을 잡아다가 합박하고 고문하여 증인으로 만들어 법정에서 세웠다. 합박당하고 매수당한 증인들은 피고들을 폭력으로서 미국정부를 쓰러뜨리려고 음모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폭탄투척 사건은 이 폭력음모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인들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재판은 질질 끌려지게 되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피고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판에 좋은 자리에 앉은 기업가와 저명인사들은 쉬는 시간마다 판사, 배심원들과 점잖게 담소를 나누고는 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피고들의 편이었다.

배심 판결은 격삭에 지나지 않았고 마침내 재판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피고인들에게는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까지 피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을 고발할 차례였다. 그들은 장엄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 사회임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법정을 압도하였으며 나아가 전국을 압도하였다. 보수적인 신문들조차 피고들의 주장이 너무 엄숙하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들의 최후 진술을 몇 마디 옮겨보자.

나는 이 도시의 빵집 노동자들이 개새끼처럼 취급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조직되는 것을 도왔다. 이것이 죄란 말인가? 이들이 16시간씩 일하는 대신에 10시간씩 일하게 되었다. 이것도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맥주 양조장의 노동자들이 새벽 4시에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밤 7시나 8시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이들을 조작하였다. 이것이 나의 큰 죄이다. 나는 잡화상의 점원들이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총동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밤 7시까지만 일하고 일요일은 쉬게 되었다. 이거야말로 큰 죄가 아닌가? (나베)

만약 그때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그러면서도 해방되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명을 알릴 수 있다고 그때가 생각한다면 가까이 나의 목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렇다. 그대는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방에서 불꽃은 들불처럼 끓어오르고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이 들불은 결코 끌 수 없으리라! (스파이즈)

재판은 끝났다. 1886년 9월 9일 나베를 제외한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남은 것은 사형 집행 뿐이었다. 사형수들은 마지막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새웠다. 아침이 밝아오자 보안관이 부하들을 데리고 감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사형수들을 결박하고 하얀 수의를 입혀 사형실로 데려갔다. 그들은 교수대 위에 흔들리는 율가미 밑에 제각기 자리를 잡았다. 흰 수의를 걸치고 앉아서인지 유난히도 키가 큰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의 태도에는 보통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엄숙함이 감돌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스파이즈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우리의 침묵이 오늘 우리를 목매는 당신들이 사형을 명령하는 소리보다 더욱 강력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파슨즈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말을 듣겠다고? 그 전에 민중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들은 처형당했다.

그러나 결국은 스파이즈의 말이 옳았다. 독점자본과 정치권력은 이들을 사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가슴 속, 억압과 착취에 맞서 타오르는 불꽃을 모두 끌 수는 없었다. 그들의 침묵은 사형을 명령하는 소리보다 더 강했다. 바로 지금도 저 미국의, 아니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기념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886년 9월 9일

1889년, 세계 20여개의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 2인터내셔널에서는 그 창립대회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 아래 1890년 5월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동시적으로 1일 8시간 노동의 확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적 시위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미국 노동총동맹이 같은 날 벌이기로 계획하고 있던 8시간 노동일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국제적인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첫 번째 세계노동절 행사는 이러한 제2인터내셔널의 결의에 입각하여 전세계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일의 쟁취라고 하는 공통의 요구를 위해 투쟁을 벌임으로써 그들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였다. 이후 세계노동절은 매시 때마다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당면의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지는 국제적 기념일로 치뤄지게 되었다.

둘째퀴즈!

노동자가 뭐예요? 근로자라면 몰라도...

노동자... 상당히 낯선 말일 수도 있군요, 그동안 자본과 정권에 의해서 쓰여져 왔던 근로자라는 말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대신해 왔기 때문이죠. 자본과 정권이 굳이 근로자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노동자라는 말을 오랜 시간동안 금기시 해왔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말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말뜻으로만 풀어 본다면 근로자와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차이 밖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역사적인 과정에서 그 두가지 말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라구요.

'근로자'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상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문득 생각하면 열심히 일한다는 뜻에서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며 반항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마치 6-70년대의 노동자들에게 수출역군, 산업역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며 마음껏 부려먹었던 것처럼,

이와는 달리 '노동자'에는 단순히 일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토지, 공장, 기계 등)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

죠, 가진 게 자기 자신의 몸과 정신뿐이어서 그것을 상품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팔며 그 댓가로 임금을 받죠.

노동자는 신분적으로 자유로와 보이지만,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기에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선거권이 있고 신분적인 제약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사장님 눈치와 재벌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한다는 거죠, 하지만 노동자는 근로자라는 말과 달리 '자신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돈과 권력, 무력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오로지 단결을 통해 가능한 거죠, 이리해서 노동자는 이제까지 단순히 주는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단결과 힘을 모아내면서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근로자'란 말 대신에 '노동자'를 쓰세요!

2. MAY-DAY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0. 들어가면서

'108주년 세계노동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노동절'을 행복하게 기념할 만큼 노동의 권리와 민중의 정자가 실현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아니, 행복하게 기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있는가? 눈을 돌려 대학의 바깥을 바라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공허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차열하게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네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100여년 전 노동자의 투쟁으로 펼쳐 나아선 당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8주년 세계노동절이 어떠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4.30 청년학생투쟁대회/문화제는 또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대학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대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들의 깊은 한숨은 온나라를 뒤덮고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은 음울하게 이땅을 휘돌고 있다. '지하철에서 자는 사람들'은 가여운 감정을 뛰어넘어 공동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바닥에 종이 몇장을 깔고 덮을 것도 없이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칠을 굴어 쾅해진 이도 적지 않다. 말쑥하게 가정을 가지고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업자가 많은 것이다. 가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너희들의 목을 재물로 바쳐야 한다"고 재벌들은 실업노동자들이 생존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도 자원의 낭비일 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고천국과 파견노동자 왕국을 건설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가들을 지원해주는 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한 민중의 생존에는 관심이 있을리 없는 초국적 자본은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편승해 오히려 고리채를 쟁거 이익을 톡톡히 챙기고 있으며 자유로운 해고와 함께 완벽한 '자본의 천국'을 요구하고 있다. 일터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력광택들의 주먹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도 이른바 '공권력'은 언제나처럼 주먹판에 서있다. 노동의 현장에서, 철거의 현장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창궐하고 있다. 크고 작은 노동투쟁의 현장들은 그들의 무력으로 잔압되고 도원동 철거현장에서도 폭력에 노출된 철거민들이 참혹하게 당하고 있어도 아만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을 중단시키는 공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사악에 불과하다. 이제 초여름이 오면서 명예퇴직이나 정년해고같은 방식으로 대량 해고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실업이 홍수를 이룰 것이다. 가정 경제의 붕괴는 가족단위의 심리적 물질적 공황을 일으켜 핵폭발처럼 사회를 뒤흔들 것이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소수를 빼면 모든 국민이 그 공포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다. 대학사회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파상적으로만 보아도 경제위기의 현실은 대학인들에게 자출 감소, 휴학급증, 군입대 증가, 과외축소 등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위기, 국가의 공공성 달락으로 인한 교육의 위기, 실업문제 해결이 취업교육 강화로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간의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는 대학의 상황은 대학인으로 하여금 존재의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생각해보라.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12년간을 제도교육과 사교육 등으로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 엄청난 교육비를 쏟아붓고 경쟁으로 내몰렸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금 마당에 대한 불안을 자신의 상품성 강화에 대한 투자와 경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대학인의 모습을 말이다. 더욱이 그러한 경쟁을 거쳐 졸업을 한 어들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 실업은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과 대학인의 변화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YS정권의 '혁명적인(?)' 교육개혁 추진이후 대학을 무한경쟁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노동의 유연화에 발맞춘 위계화된 인력양성소로 전락시키며 대학인의 주체성을 해

체시키는 방향성은 동일하나 현재는 그러한 방향성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과 동시에 '인력양성소'로서의 위상마저 가질 수 없게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각종 논자들이 제출하는 "이제는 기업의 요구와 구미에 맞게 대학도 인력상품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조차도, 생산된 인력상품을 소비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도 부도가 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회적 공포에 다름아닌 바, 가히 대학의 기업화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2/ IMF, 그리고 김대중 정권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더니 급기야는 IMF 구제금융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의 상황을 맞이했고 언뜻아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김대중 정권이 등장했다. 그러나, 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던 김대중 정권도, 한국경제의 구원자로 보이던 IMF도 민중들의 생존의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더 위협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 '고통분담'을 하던 노사정위원회만 보더라도 독정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어떠한 고통도 분담하지 않은채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라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조치들만 통과시킨채 끝났지 않은가. 더욱이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공공연한 발언은 자금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이 '총체적인 민중생활의 위기를 극복한다기 보다는 '자본의 이윤창출'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술 더떠 재벌자들은 민생파탄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권력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만 혈안이 되어 그들 내부의 싸움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바야흐로 재벌세력이 강제하는 사회재편과 그를 위한 재빨리테올로기에 대해 노동자 민중이 단결하여 싸우지 않으면 힘없고 돈없는 이들의 출혈만 계속될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사회적합의주의'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재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주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4.30과 메이데이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4.30과 메이데이에 참가하면서 무엇을 앞으로 해야할 지 부족하나마 정리해보자.

3/ 4.30과 Mayday,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가?

1) 집중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권리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공세적으로 진행이
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의의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들의 목이 아니라 가진 자의 목이며 민중들의 고통이 아니라 아직도 견고히 자리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을 짓밟고 세워진 가진자들의 '국가경제'는 민중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잔정하고도 올바른 것은 대다수 민중들의 생존을 장악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드높여야 할 것이다.

2) 대학의 노동이 공동의 투쟁의 개개로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펼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판적 자성의 산실이 아니라 '실업자 양육소'로 전락한 대학의 현실은 노동자들이 처한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즉, 실업과 해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결국 대학인의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투쟁을 통해 대학과 노동을 다시금 온몸으로 결합시켜 내야 할 것이다. 머릿속에서만 살아있는 노학연대·민중연대가 아닌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대학과 노동의 연대를 펼치는 출발점으로 금번 4.30/메이데이를 만들어야 한다.

3) 침체되어 있는 대학사회의 움직임을 촉발시키고 대중의 불만을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학사회의 변화와 학생운동의 위기는 비단 학생운동만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전반을 무기력과 참제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인 스스로 발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개를 다양하게 창출해야 할 것임바, 현재 노동자 민중이 처한 상황과 대학인의 현실적 조건은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민중생존의 위기가 만나라의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대학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힘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5.6월 투쟁의 흐름을 광범위하게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4.30/메이데이 투쟁이 단지 그날 만의 '행사'가 아니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점으로 여하하게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쉽지 않은 싸움을 준비하는 촉발점으로 4.30/메이데이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5.6월 투쟁의 흐름을 아야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에 전국노동자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이어 6월 초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리는 적극적인 계획을 준비해 들어가자.

4. 마치며

우리의 투쟁은 거창한 무엇인가를 대단한 듯 떠벌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오직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 남는' 투쟁을 펼치는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한주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실질적 실업자, 특히 주부로서 대졸 고학력으로서 취업을 못하는 이들까지 생애 넣으면 지금 실업자 총수는 4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108주년 메이데이는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애 다가오고 있다. 우리들의 투쟁과 함성으로 우리에게 강요되는 굴레와 숙명을 대우는 불꽃을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아제는 청년학생의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되어버린 노동자와 함께,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의 삶을 함께 지키기 위해 현실로부터 끈덕진 실천을 통해 저들의 손에 쥐어진 권력을 뺏아오도록 노력해야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싸움은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며 내일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퀴즈?

신자유주의가 뭘까요?

신자유주의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향으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구조적 위기속에서 생산품의 재고는 늘어갔고 개별자본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본이 순환되는 고리가 위기에 처하면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전세계적인 자본의 지구화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무조건적인 탄압과 회유로서 분열시키는 두가지 전략을 통해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탈정치 의식을 확대시키며 정치를 하나의 대중적 미디어 장치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모시켜 정권이나 자본의 잘못도 각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권력을 직접적인 '경제'분야에 강력히 집중시켜 작고 강한 정부를 천명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전지구적 차원의 금융적 무정부성과 과잉축적, 금융투기를 양산시키게 되는 거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여 노동운동진영조차 자본축적의 파트너로 복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사회적 합의주의, 혹은 코포라티즘이라고 하더군요... 어려운 내용인가요?

3. 김대중 정권, 그 이름만 '국민의 정부'였다.

1. '국민정부'의 대량실업 무대책을 비판한다.

김대중 정권의 실업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1) 고용유지 정책(Job Keeping) 2) 고용창출정책(Job Creation) 3) 생활안정 자원 정책(Social Care) 등이 있다. 각각의 정책별로 조목조목 살펴보자.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대중정권의 이 정책들은 실업자제를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지도 못하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정책들일 뿐이다. 김정권이 보이는 이러한 한계는 김정권 또한 재벌이나 정치권, 고위관료, 그리고 투기 자본으로 돈을 모아왔던 사람 등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 '손'을 쓰기보다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긁어모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反국민 정부'임을 보여준다.

1)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김대중정권의 실업대책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는 그대로 방치한 채 구조적 성격의 사업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장권 내부의 비판이 4월 20일자 한겨레신문에는 실렸다. 정확한 자기비판이었다.

김대중정권의 고용유지 정책부터 살펴보자.

우선 김대중 정권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적극적인 실업대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보장하면서, 구조조정은 대량실업촉진책일뿐이다. 물론 과도한 중복투자가 된 경우, 기업간 인수 합병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 사장이 바뀌더라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강구하면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할 생각을 않고 노동자들은 어쩌되더라도 구조조정만이 살 길이다 하는 식의 김대중 정권의 정책은 그들이 진정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가장 적극적인 실업억제 및 고용창출 정책인 근로시간의 단축문제에서 정권은 그저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을 뿐이다. 주당 노동시간 44시간제인 지금의 근로기준법을 주당 40시간이나 35시간제로 바꾸어 일자리를 나누어 갖고 실업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가?

다음으로 김대중정권의 고용창출 정책을 살펴보자.

공공근로사업(청소, 자원방범요원, 교통정리 요원 등)을 벌이고,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열에 아홉은 실패한다. 고용창출은커녕 끊임없이 잠재적 실업이 발생할 뿐이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단기간의 최저생계비를 보조하는 효과정도이다. 그나마 정부 각 부처간에 재원마련을 위한 다툼이 많아 제대로 실현되지도 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전면허용은 고용창출이 아니라 대량실업사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대차가 이끌었던 영국의 예를 보면 지난 79년 투자창설치 이후 지난 95년까지 외국인 투자는 약 235조원이고 직접 고용효과는 77만명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국영기업 부문에서만 200만명에 이르렀다. 어찌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않겠는가?

끝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정책을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실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1년 이하 일하다 잘린 노동자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시직, 사간제 노동자들은 아예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60일에 불과하여 두 달이 지나도 실업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이상으로 김대중 정권의 실업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 문제와 한계점 - 특히 생계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 에 대해서 정권과 자본측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재원' 다사달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서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있다고 본다. 다음 부분은 재원마련 문제를 통한 '김대중정권 바로보기'이다.

2) '사람들 어렵민' 조를 늘이는 김대중정권

김대중 정권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대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비살명 장기채권' 발행, 공무원 봉급 삭감, '실업기금마련을 위한 한마음 바자회' 등이다. 물론 여기에는 부르조아 언론이나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각종 '실업자금 마련 저축'이나 '실업기금모금' 국민운동같은 것도 따라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어려저러한 대책들과 언론과 금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캠페인성 대책들은 첫째,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시키는 방식이며 둘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의 성과마저 허물어뜨리는 방식이다.

김대중정권은 '비살명 장기채권'(쉽게 말해서 정부가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 계약서를 써주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을 발행해서 2조6천억원의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을 조상하겠다고 한다. 하지

만 비실명 장기재권은 지금까지 500억원 정도의 저조한 실적을 내는 등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데, 이 때문에 '검은돈' 지하자금을 근절하겠다는 금융실명제의 기본틀이 완전히 붕괴될 자경에 이르렀다. 비실명 장기재권 발행이 실사 잘 된다하더라도 원금과 이자의 상환문제와 이자 및 상속/증여때에 소득세가 감소세금을 부과하려고 해도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함으로 장기적으로는 실업대책을 위한 자금마련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봉급삭감을 통해 1조1천억원 정도의 실업대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이미 공무원 임금을 삭감했다. 하지만 저임금과 물가폭등에 따르는 실질임금 감소로 시달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빈민화되고 있다.

또 정권은 자동차 기름값에 주행세를 부과하여 실업대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권이 일반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간접세를 인상함으로써 실업대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다. 올해 총 조세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은 9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50%를 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세 확대는 국제통화기금 관리경제 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의 비용부담이 소비자와 봉급생활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왜 직접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서 부유층/불로소득자들로부터 좀 더 세금을 걷어 실업대책자금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고급리 사대에 이자소득만으로도 먹고살기에 충분할 만큼 돈을 벌고 있는 금융소득자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더 부과하여 실업대책 자금을 마련하면 좋을 터인데 말이다. 작년에 도입하려다 실패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각종 방법으로 획득하는 이자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방식)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무기구입을 중단하는 등 국방비를 감축하여 실업대책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일반 서민들의 생계고통을 줄이면서도 실업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삭감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군 전략에 비해 남한에서 과도하게 국방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내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감히 대대적인 국방예산 감축과 민생지출로의 전환을 시도조차 아니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김대중정권이 결코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득권세력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노동자와 서민의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하는 김대중정권, 그들이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2. '고통분담' 여태 이렇듯 거짓말은 없었다.

1) 표류하는 재벌개혁, 정치개혁

현재의 경제위기는 재벌과 정권, 금융이 연관된 총체적 부실체에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 역시 그들이 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은 노동자, 민중이 겪는 그것에 비할바 없이 커야 함이 당연하다. 그래야 비로소 명실상부한 고통분담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아직까지 재벌과 정치권이 민중이 겪는 선용과 같은 그런 고통겨운 소리를 내는 것을 들 어본 적이 없다. 말로는 개혁이냐 고통분담이냐 떠돌고 있지만, 실상 말잔치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이내 그들의 기득 권 어느 하나라도 내놓은 예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벌개혁의 과제란 아려이러한 것이라곤 늘어놓는 내용들을 보면 재벌의 행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혹자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대기업을 자양하기도 하고 혹자는 총수의 독단 경영을 막기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원하며, 또 어떤 이는 소수 재벌이 한국경제에서 갖는 독점적 지배력을 문제삼으며 간소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아렇듯 나열하자면 재벌의 문제는 여러가지이지만 실상 추진된 것이라곤 수십, 수백개의 계열사를 '그룹으로 묶어 선 단식으로 경영'하는 체제를 바꾸어 내고자 하는 '회장실, 기획조정실'의 폐지 정도였다. 이는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밀어부친 '개혁'과제인데 그래서인지 그나마 추진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이름만 바뀔 뿐, 여전히 그룹 총수와 그 족 벌들에 의한 지배가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이 '지주회사의 허용'을 약속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보장해 주었는데도 그 정도의 '합리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채 경영이 일상화된 재무구조 개선이나 문제발식으로 확장한 계열사 축소 역시 여전히 요원하기만 한 과제이다. 빚더미경쟁을 아예는 하지 말라고 상호지급보증을 4월부터 엄격 하게 한다고 발표하자 재벌들은 4월이 되기 전에 상호지급보증방식으로 은행에서 돈을 왕창 꾸어가는 뽀뽀함마저 보 였다. 기업은 부실할 대로 부실하게 만들었지만 자신들의 재산만은 안전하게 수십억달러씩 모아둔 재벌총수들, 그들 의 돈을 회사에 출자하거나 기부하여 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이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다. 오히려 이런 요 구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은 아랑곳없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며 팔뚝 휘기만 하는 재벌총수들이다.

'뼈를 쥐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다만 노동자의 '목줄을 졸라매는' 인원감축만을 시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고통분담' 예의 동함이란 구호는 참으로 무색해지고 만다.

2) 뽀뽀함에게 정해지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비용부담

찾아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마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다. 물론 이는 재벌이나 부유층, 정치권 등 기득권층의 손해를 전패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3월 4일 발표한 '종합소 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연간 종합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96년 소득을 기준으로 2만 3천여명이라고 한 다. 전체 납세자의 2%에도 못 미치는 수인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전체 소득액의 20%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

다는 사실이다. 편법적인 탈세나 조세회피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눈덩이처럼 커지리라는 것이 확실한 바, 참으로 기가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이 사람들한테서 재원을 마련할 노력을 벌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이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큰 방법인 조세제도가 그것을 증명한다.

여기 몇 가지 자료를 우선 보자

① 한겨레21 1998년 1월 22일 제192호 : "그 돈으로 외채 다 갚겠네"

우리나라 재벌총수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미국의 경제주간지인 '포브스'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계 2백대 억만장자 기업인 명단에는 국내에서 4명이 들어가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족이 총재산 52억달러(당시 약 4조6천8백억원)로 세계에서 47번째, 국내에서 최고부자로 꼽혔다. 다음은 역시 52억달러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족(48위), 22억달러의 구본무 LG그룹 회장 일가족(1백49위), 20억달러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일가족(1백64위) 등이다...

② 한겨레신문 3월 23일자 : 간접세 비중 다시 50% 넘어

올해 총 조세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9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50%를 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세 확대는 국제통화기금 관리경제 아래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의 비용부담이 소비자와 봉급생활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2일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에 따르면 예초의 예산안에서는 직접세를 뺀 간접세의 비중이 48.7%였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52.6%로 3.9%포인트나 높아졌다. 올해 추경예산안에서 직·간접세 비중이 역전된 것은 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계기로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재원의 확충을 위해 석유류 등에 대한 소비세 등 간접세의 세율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융실명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바람에 금융부문 직접세 정수가 위축된 것도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2%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액의 20%를 차지하는 사회 실체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벌총수의 재산, 이것이 바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하지만 경제위기가되면서도 이들은 자기화사 예초자 재산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이 집권초기 총수들의 사재출자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롯데에서만 겨우 웅

했을 뿐, 남은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는 식의 반발뿐이었다. IMF 고금리 사태를 맞이하여 오히려 20%에 가까운 이자율에 이들은 들떠있다.(생각해보라, 100억이 있는 사람이면 1년 뒤에 저절로 20억이 굴러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권은 재원마련을 위해 이러한 부유층·불로소득자들에게 대한 과세보다는 오히려 일반 국민 대중이 무의식 중에 부담하는 간접세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안그래도 경제위기가상에서 생활고에 힘겨워하고 있는 서민들한테서 정 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행방상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이다. 대조적으로 정부는 양도세 폐지나 취득세의 축소, 그리고 중여·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비합명 장기채권 발행 등 부유층의 숨통을 열어주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서민 대중의 세금부담은 증가시키면서 부유층의 세금부담은 줄여주는 부조리의 극단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경제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만 할 것이 분명하다. 저임금·고실업·고물가에 사달리는 서민대중을 상대로 설 새 없이 '금모으기', '살업자 돕기 모금운동' 등 국가재정조달에 동원하고 있으면서 이제 간접세 비중까지 늘린다면 커다란 조세저항에 부딪히거나 국민생계의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대체 얼마나 더 쥐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서 지적했듯이 이는 곧 내수시장에서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침체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의 조세정책은 무엇보다도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따라야 한다. 주식매매차익 및 양도차익 등 자본 이득에 대한 종과세, 고금리사태 가액의 이자소득에 대한 종과세 도입, 변칙 탈세를 막는 엄격한 중여·상속세 부과 절실하게 필요하다. 기득권층의 막대한 재산을 사회로 되돌릴 생각을 해야 한다.

3. 다시 '국민의 정부'를 생각한다.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김대중 정권이 어떤 살업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경제정책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김대중 정권의 살업대책과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정말 살업을 막겠다는 것인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해보겠다는 것인지, 의심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는 김대중정권이 그리고 국민회의가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말은 이미 거짓나부랭이었음이 드러났다.

더 이상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김대중 정권은 자본가와 불로소득자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끝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기득권세력의 정부'일 뿐이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의 생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책임감도 느낄 줄 모르는 '반민중적 정부'이다.

둘째퀴즈?

민주노총이 뭐예요?

'노동자'라는 말조차 금기시 되었을 정도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정권이 지배하던 70~80년대 암울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그 암울하던 시절에도 전태일 열사와 같은 선구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은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대표적인 일이지요.

87년 6월 민주항쟁에 뒤이어 일어난 7, 8, 9월의 노동자 투쟁을 시작으로 드디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동운동은 전국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건설 민주노조'라는 한 목소리로 동참하는 폭발적 형태로 발전합니다. 정권의 통제기구에 불과하던 어용노조들이 조합원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노조로 바뀌어갔고, 그나마 어용노조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수많은 중소 사업장에서는 새로 민주노조가 결성되게 되죠.

87년 7, 8, 9 달 석달 동안 새로 결성된 노조만 약 1300여개. 한 사업장에 건설된 민주노조는 금세 이웃 사업장으로 번져나갔고 이들은 다시 함께 모여 더 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 전국의 노동조합들은 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결성하며 드디어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노협의 앞길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의 본보기로 전노협에 집중 포화를 가했고, 전노협은 이에 맞서 버티면서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계속 발전해나가는 민주노조운동을 포괄하는 구심점으로 성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었죠.

90년대 들어 현대, 대우 등 대기업노조가 새로이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떠올랐고, 이와 함께 사무,전문직의 업종별 노조들도 '업종회의'를 결성하며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 세 흐름-전노협, 업종회의, 대기업노조-을 모두 포괄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조직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 대중들 역시 새로운 노동자 대표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간 우리나라 유일의 노동자 대표조직으로 군림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이해보다는 기업과 정부의 이해에 충실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해 노동자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왔었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자 대표조직에 대한 요구로, 이는 '민주노총 건설하자'는 구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발전의 필요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자 대표조직에 대한 요구 등을 받아들여 94년 11월부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지난해 95년 11월 12일 민주노총이 탄생한 것입니다. 아셨죠?

4. 학생운동, 대중적 정치활동강화와

차이를 넘는 연대로 거듭나자!

1. 한총련? 그게 뭐죠?

한국학생운동은 과거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소수의 선진인자들이 강고한 대오를 형성하여 그야말로 선두투쟁을 진행하던 것의 한계를 절감하고 87년을 전후로 '대중노선'을 확고하게 인식하면서 학생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학생운동의 역사에 있어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보다 넓은 장에서 보다 확장된 대중들과 함께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폭발적인 대중동력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비로서 학생회는 대중자치조직으로서의 위상으로 안정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민주적인 절차로 선거에 의해 구성되게 됩니다. 이 때 만들어진 것이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입니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대협은 '협약체'였습니다. 협약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층의 구속력이 전일적으로 미치지 않고 대표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투쟁을 펼치는 체제였습니다. 전대협이 93년도에 '한총련'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으로 변화된 것은 총학생회가 가입단위가 되면서 단대학생회장까지 대의원이 된 것입니다. 한총련은 이후의 발전전망을 '한학련'으로하여 과학대학장까지 대의원으로 포괄하는 전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대협-한총련의 진행과정은 오직 '대중투쟁'을 통한 조직의 건설과정이었고 그 바탕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정견을 가지고 통일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주도에 의한 강력한 대중장악력에 기반한 학생운동 내의 주도력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 이른바 좌파들이 존재했고 전대협-한총련을 이끌어온 주류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과 실천도 했으나 그것은 한총련과 다른 어떠한 조직이 아니라 '한총련 개혁' 혹은 '대중운동의 민중운동중심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연대해온 것이었습니다. 즉, 좌파학생운동 역시 한총련이라는 학생운동 연합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학생운동의 일각을 담당해온 것입니다. 또한 한총련이라는 학생회 연합체는 형식적으로 보아도 전국의 20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파와 정견을 떠나서 외부적으로는 학생운동의 단일대오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단일한 학생회 연합체였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투쟁을 펼침에 있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위기라는 것은 전체 학생운동 전영 모두가 당연한 문제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체 운동 역시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주류세력의 경우는 이러한 위기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간부혁신'의 문제로 돌려 했으며 좌파의 경우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실효성이나 현실분석능력과 대안적 모습의 부족함으로 위기는 계속 자연되면서 마침내 96년 연세대 사태와 97년 한총련 출범식 사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2. 학생운동에 있어 연합체 운동은 어떤 필요한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대중투쟁을 통해 정권과 자본에 대항해 싸우면서 학생운동의 전국적 단일대오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학생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97년 이전에 한총련에 대해서 아적단체 규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전국 대학생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들이 가입한 대중조직'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의 대학생 모두를 아적단체 구성원으로 보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학생화라는 대중조직이 전국적인 단일대오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역별, 정권별로 갈갈이 찢어져 있다면 학생운동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며 정권의 조그만 탄압에도 쉽게 무너져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운동이 존재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학생운동이 아니게 되는 것이요, 민주노총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지만 민주노총이라는 단일한 노동조합 총연맹으로 묶여 있음으로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생운동을 혁신하여 대중과 과를 좁히고 대중과 함께 호흡하려면, 그것은 작은 학교단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 학생운동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학생회 연합체를 통해 더욱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적인 학생회 연합체인 '한총련'이 지난 시기 계속 겪어왔던 오류를 혁신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나가려 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관점과 실천으로 연합체 운동을 혁신해야 하겠습니까?

3. 연합체 운동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학생운동 혁신에 있어서 연합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합체 운동의 혁신이 학생운동 혁신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운동 혁신이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부터 말해온 바, 기층 대중운동을 강화하고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저항양상을 무기들과 연대하는 등이 지금까지 논의된 학생운동 혁신의 방향성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층 과, 학회 동아리에서부터 단대학생회 총학생회에 이르기까지 동시적으로 차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체 운동 역시 이러한 혁신의

방향성 하에서 진행되어 할 것인데 현대와 같이 학생운동 잔영 간의 신뢰가 바닥나고 학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한총련/서총련의 주류가 또다시 마치 학생운동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연합체운동을 물고 간다면 이는 기층의 혁신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학생운동의 거듭남에 대단히 장애가 될 것입니다. 비단 기존 주류의 독주를 막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학생대중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학생운동을 혁신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 연합체 운동의 혁신은 관건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상충간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단위 학생회에 걸쭉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연합체 운동을 혁신하기 위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학생운동의 대다수 잔영이 동의할 수 있는 연합체 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학생운동 어느 세력이 '갯밭'을 뜯고 해서 다른 세력이 걸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공통의 자반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연합체 운동을 복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중운동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운동은 기본적으로 대중운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체 운동 역시 대중조직의 연합인 만큼, 과도한 정세인식과 선전활동가 중심의 투쟁은 자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보다 무서운 것은 대중의 냉소와 불신이며 화염병을 던지는 투쟁보다 어려운 것은 대중들을 바로 변화의 주역으로 세워내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대중운동이 그 내에서 교류되고 풍부해질 수 있는 연합체운동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세력으로 서기 위해 반드시 대중정치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혁신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체계의 건설에 우선되는 문제입니다. 즉 조직에 대한 혁신 운동의 우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건강한 논쟁, 대중운동의 새로운 정형을 창출하기 위한 관점과 실천 계획 등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대중에 기반한 혁신입니다. 이것은 그간 연합체 운동에 관한 논의가 상충간의 논쟁으로만 국한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캠프 대표자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발언하는 것조차 꺼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혁신이 기본적으로 대중운동을 혁신하고 그것과 함께 연합체 운동을 혁신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대중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4. 좌파잔영이 기존 한총련체계와는 다른 연합체를 구성해야 하는거 아닌가?

좌파잔영 일각에서는 기존의 한총련을 '주체사상에 의해 장악된 연합체'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지금 파탄났고 그 내부에서의 혁신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들이 따로 모여서 독자적인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한총련 출범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된 이러한 '2파 한총련 노선'은 한총련에 대항되는 그 무엇만을 사고하면서 건강한 대중

운동에 기반한다기 보다는 '좌파학생회 모임'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함으로 인해 실천적으로 파단난 노선에 다음아나라 할 것입니다. 물론 올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좌파전영이 총학생회에 대거 당선되었지만 이는 올해의 한상일 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씩 좌파전영의 '연합체'를 한총련이나 서총련에 대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장의 정권이 학생회 전반의 대중운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에야 아들로 '좌파연합체'를 만든다는 치다라도 그것이 얼마나 규정력을 가지겠습니까? 알레로 총학생회장은 좌파인데, 우파 단대학생회가 많다면 그것으로 좌파연합체를 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좌파연대운동의 한 형태라면 몰라도 '연합체'로서 이것이 제기된다면 현실적이지도 않고 내용도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기존의 한총련의 상층부를 좌파가 장악하면 되는 식의 '권력교체'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생운동 혁신, 연합체운동 혁신은 대중운동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틀거리로 연합체를 사고하는 만큼 이러한 2파 한총련 식의 발상은 비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합체 운동에 대해 손놓고 바라보지도 않고, 배타하지도 않으면서 연합체 운동 내부에서 혁신의 흐름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자들의 발언을 통해, 대중적 의견개진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연합체 운동 내부에서 비판과 혁신논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혹자는 좌파의 힘이 너무 미약하여 연합체운동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연합체 운동을 선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난 뒤에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재내 틀러, 우리끼리 하자'고만 하는 것은 실현불가능 할뿐더러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다음아나라기 때문입니다.

5. 지금의 한총련 6기 임시체제 건설러정을 보았을 때, 다른 세력들이 개입하기 힘들까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한총련 중앙집행위는 지난해 말부터 6기 인선을 서둘렀고 5기 권한대행인 유영업 남총련 권한대행이 6기 임시중앙을 소집하여 그 자리에서 전복총련, 서총련, 강총련 등을 사고처리하고 경안총련의 문제제기를 묵살하면서까지 독단적으로 임시의당을 세웠습니다. "오직 민중들의 투쟁의 부름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한총련 조직건설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유일한 명분이었으며 이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은 '분열주의'로 낙인찍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총련 주류는 다른 세력들이 한총련을 박차고 나가더라도 자기들끼리만의 한총련을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서울, 강원, 경인, 전북 등의 지역이 아직 총련체제가 없거나 강력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총련 주류는 이를 받아안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다지 한총련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주로 착목

하고 있는 지점은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지역은 40만을 포괄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많은 세력이 포진하면서 활발한 대중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연합체 운동 혁신'의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이나 한총련 자체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경인지역에서의 발언력, 강원지역에서의 발언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면 그야말로 강력한 비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서울지역 연합체운동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지역에서도 최대한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총련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한총련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대중적 문제제기와 비판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혁신'의 '혁신'도 얘기하지 못한 채 주류가 이끄는 대로 휘둘릴 수 있으며 대중운동에 상당한 절곡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벌써 한총련 중앙에서는 대의원대회와 출범식 일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문제제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것이며 다시 한번 모험을 강행함으로써 학생대중운동을 그야말로 파멸로 몰고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6. 진정 학생운동을 힘있게 민중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학생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현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연합체 운동의 혁신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각인하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적 논의를 가져가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게는 '연합체 운동에 대한 대중적 의견개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단위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토론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합체 운동의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학생운동의 혁신도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하는 길을 학생운동 역사상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몰아치는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내부적으로 분출되는 위기관리는 두 가지 시련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2000년대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하여 함께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10년의 학생운동을 가를 수도 있는 순간 순간임을 자각하고 매시기 보다 대중운동다운 수 있는 실천, 보다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일구기 위해 한치의 주저도 없이 전진합시다. 투쟁!

5. 토론거리입니다.

토론 1.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몇 년 동안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어 제조원가가 높아져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과 다릅니다.

표1) 명목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비교

연도	명목임금 상승률(%)	노동생산성 향상률(%)
1990	20.2	11.7
1991	16.9	12.0
1992	15.7	9.0
1993	10.9	7.1
1994	15.5	9.2
1995	9.9	10.1

우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출액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91년 9.1%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95년에 겨우 7.8%를 차지할 뿐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높아서 원가부담이 크다는 주장은 암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명목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물가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과 비교하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표2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오른 비율보다 생산성 향상 비율이 항상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금상승에 의해 경쟁력이 약화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임금 오른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표2) 실질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상승률 비교

연도	실질임금 상승률(%)	노동생산성 향상률(%)
1990	-	11.7
1991	7.0	12.0
1992	8.9	9.0
1993	5.8	7.1
1994	8.7	9.2
1995	5.2	10.1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산성 증가율을 바탕으로 임금안정률이 결정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노동의 재생산 비용(=생계비)이므로 임금안정의 기준은 생계비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생산성이 항상보다 임금안정률이 더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생계비를 기준으로 안정되어야 할 임금을 비교대상도 아닌 생산성과 비교함으로써 정부와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계유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토론2 우리나라 임금이 주요 경쟁 상대국보다 높다?

또 정권과 자본가들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들먹이며 '국민소득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다. 따라서 임금안정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94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한 임금수준이 한국은 1.80으로 미국의 1.02, 일본의 1.28, 대만의 1.20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수준과 각 나라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소득과 비교한 임금수준은 국제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국민소득 대비 임금수준이 우리 나라보다 낮은 것은 노동자들이 임금 이외에도 갖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등을 통해 혜택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가계지출의 30%-40%에 육박하는 사교육비, 부실한 의료보장 제도로 인한 의료비, 찬장부지로 뛰는 값 등 엄청난 부담을 임금으로 다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하니 국민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부에서 가져가는 몫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표3 참고)

표3)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노동소득 분배율	52.3	54.3	54.1	52.6	51.2	47.7

반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미국, 일본에서 국민소득 중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각각 73.9%, 86.9%에 달했습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의 굴레를 못벗어 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제조업 시간당 비용 국제비교는 더 정확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표4참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4) 세계 각국의 제조업 시간당 비용 국제비교

나라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캐나다	독일	홍콩
	3.71	14.91	12.80	3.78	3.93	15.83	21.96	3.20

토론3 국민들이 흥청망청 과소비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정권과 자본가들은 '공익광고', '연론'을 동원해 노동자, 서민들이 '근로보다는 여가를 좋아'하고 흥청망청 물 쓰듯 돈을 쓰는 과소비 풍조에 젖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소비 풍조로 인해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저축이 둔화되어 금리가 높아지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자신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업·특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과소비라는 것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진짜 과소비는 나라가 어렵다는데 한가하게 외유나 갔다오고 사치품이나 수입해 쓰는 독점재벌과 부유층, 정치모라배들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지난 97년 4월에는 국회의원들이 한국통선이 제공해준 돈으로 미국에 가서 골프나 즐기고 돌아오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여 국민들로부터 재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97년 3월달 대우그룹은 사치품 수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섹스제널'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어문에 밀려 계획을 백지화하는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비싼 고급 외제차의 판매대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천만원의 오피도 불타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지어낸 거짓 말입니다.

토론 4.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란 무엇일까?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보수-재벌 정치에만 의존하여 몇년에 한번씩 투표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있기를 거부하면서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전반에 주도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회에서 보수정치꾼들이 자신의 당리당략과 독점재벌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소수 재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과 이를 통한 대안적 세력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은 모두 정치세력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만 크게 내는 이른바 '이기주의'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에서 억압받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청년학생들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떠넘기려는 자본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4월 13일 9시 뉴스를 보면 앞으로 대기업에서의 정략해고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150여만명이 실업자로 전락했는데 이제서야 본격적인 정략해고를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전가를 통해 자신들의 축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소리 일 것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우리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정략해고 본세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투쟁을 벌여내어 그 성과를 정치세력화로 귀결시켜내야 합니다.

토론 5. 무노동 무임금 -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임금을 주어야 합니까?

파업중인 노동자에게 가장 많이 퍼부어지는 자본가들의 공세가 바로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법률화 되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파업을 벌이는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일견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논리입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그를 고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비를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불하게 됩니다. 파업 중인 노동자는 자신의 사회 경제적 처지와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본가는 일단 고용을 한 이상 그의 생계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파업을 가로막아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파업중이라고 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파업으로 인한 회사측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 그 자체를 바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6. 세상이 왜 이래? - 14대 총여에서

정리하고 0순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어렵고..... 실업대란의 한파로부터 무사할 수 있는 노동자·민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200만이 넘는 실업자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현 정부가 밝히고 있는 올해 실업 예상율은 4~7%(약 90-150만)이지만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현재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98년 현재 완전 실업자는 146만명인데 비구직 취업희망자를 실업율을 보이게 된다. 여기에 적대적 기업인수합병등이 가져올 정리해고의 문제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행될 정리해고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데, 97년 2/4분기 전체 실업자수는 56만명으로 집계되어, 96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3%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성실업률은 20.8%증가한 반면 여성실업률은 60.05%증가하여 여성실업률의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기혼여성이나 미혼여성들이 정리해고의 1순위인 것을 보면 그 증가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여성이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남성에 비하여 임금이 적다는 것 노동 현장 내에서의 각종 불합리한 노동환경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의 모색은 그래도 화두(?)인 것이다. 정리해고 0순위인 기혼 여성, 미혼 여성인 우리는 일할 권리라든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IMF라 표현되는 심각한 국가경제위기의 사태를 살면서 여성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맡아하지 않을 수 없다.

절망의 양에 치든, 대책없는 정리해고

불법·부당 노동행위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 내리는 말이다. 이는 간단히 말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최소한의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월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의 법제화가 '노사정 합의'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허용되었다. 그러나 엄연히 그것이 법인 이상 해고사에는 '해고회피노력, 60일전 사전통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 합법적 절차와 '간헐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근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노동현장에서는 실제로 '간헐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해서라기 보다는 'IMF시대'라는 좋은 핑계거리를 등에 업고 이름에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이름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있어 여성노동자가 가장 심각한 불합리를 당할 뿐 만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다. 정부에서 무차별적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기업의 행위를 자제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 뿐이다.

현재 IMF시대라는 건축에서 노동자들의 양방적인 화를 강요하고, 기업이 살아야 일하는 노동자도 살수 있다는 논리속에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자본가 측에 의하여 양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국가는 전혀 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가족이데올로기의 논리속에서 여성에 대한 정리해고가 더욱 당연시 되는 상황이다. 실업급여에서도 실직 여성은 소외되고 부차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IMF시대, 일하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성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는 다른 노동의 조건을 가진다. 모성보호, 생리휴가, 육아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조건은 여성노동자가 열악하고, 고용비용 등으로 이데올로기화하여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정리해고로 이어진다. 많은 기업들이 유급생리휴가제를 폐지하고 있고, 육아 휴직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다. 육아 휴직은 바로 영원 휴직의 지름길인 것이다.

당장 일할 자리마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기는 부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고질적인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모성비용, 생리휴가, 육아에 따른 여성에게만 자위되는 노동 억압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노동권을 말살하고, 산업 등의 고용불안의 문제에 대해 전만적인 비판, 우리의 생존권 지키기 가 필요한 때이다.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는 바로 몇 년 후의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확언한다.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일할 권리, 여성으로서의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며 노동할 수 있기를 말이다. 이것은 말로만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과 노동, 여성과 자본의 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권, 인간다운 권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찾아지는 것이다.

IMF라는 국가경제위기의 현상에서 맞이하는 108주년 메아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더 나아가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 정권과 자본가는 말한다. 재벌의 구조 조정도 하고 있고, 실업금도 모으고 있다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자신들의 권리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